이주노동자 일자리 역대 '최대' 처우는 '뒷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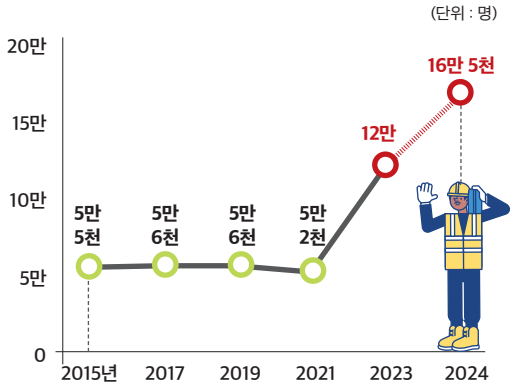
고용허가제 인력 및 업종 대폭 확대

고용허가제는 제조업·건설업·농업·어업 등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의 노동자는 E-9 비자를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 송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등 16개 국가다. 정부는 타지키스탄을 신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해 2025년부터 타지키스탄 인력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확정했으며, 도입 허용 업종도 음식점업, 임업, 광업, 호텔·콘도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업장 변경금지 등 고용허가제 문제점

경남이주민센터의 '경남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생활 실태조사 결과(2019년)'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자율적 사업장 변경금지(27.7%), 사업장 변경

고용허가제(E-9) 도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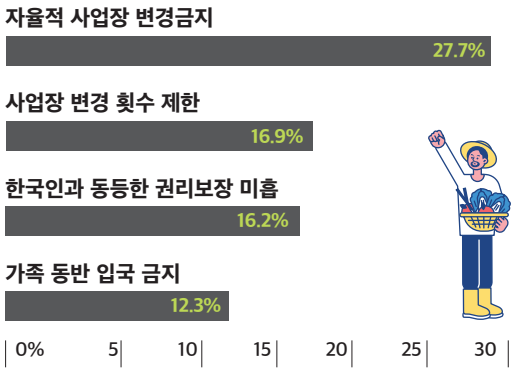
고용허가제(E-9) 신규 허용 업·직종

음식점업	한식업 중 주요 지역 내 일정 업력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
광업	연간 생산량 15만 톤 이상 사업장의 단순종사원
임업	산림사업 시행법인·종묘생산법인의 단순종사원
호텔 콘도업	주요 관광권역 호텔·콘도업의 건물청소원·주방보조원

자료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횟수 제한(16.9%), 상여금이나 근속연수 불인정 등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 보장 미흡(16.2%), 가족 동반 입국 금지(12.3%) 등의 순으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꼽았다. 또 이주노동자들 13.1%는 일터에서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폭행 가해자는 사업주(31.3%)가 가장 많았으며, 한국인 노동자(29.2%), 관리자(27.1%), 직장 내 이주노동자(8.3%) 순이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이주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및 산업안전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몇 차례 밝힌 바 있지만,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불만사항



자료 : 경남이주민센터

산재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

2020년 1월~2022년 8월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총 2만2,361건으로 집계됐다. 산재는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6천200건, 전체 산재의 67%(1만4,391건)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망 사고도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집중됐다. 산재로 인정받은 사망 사고(300) 가운데 32.7%(98건)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5~30인 미만 사업장은 31%(93건)으로 나타났다. 10명 가운데 6명(63.7%)이 30인 미만 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주노동자 산재의 대부분은 짧은 근로일수로 인한 '미숙함'과 안전 '부주의'를 원인으로 한다. 내국인과는 별도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보건 시스템이 절실하다.

이주노동자 산재 현황 (2020년 1월~2022년 8월)

구분	전체			사망		
	합계	승인	불승인	합계	승인	불승인
5인 미만	6,492	6,200	292	114	98	16
5~30인 미만	8,484	8,191	293	115	93	22
30~50인 미만	1,847	1,788	59	34	25	9
50~100인 미만	1,561	1,500	61	24	24	-
100~300인 미만	1,209	1,165	44	18	16	2
300~500인 미만	308	301	7	5	5	-
500~1,000인 미만	505	484	21	21	16	5
1,000인 이상	1,955	1,849	106	32	23	9
합계	22,361	21,478	833	363	300	63

자료 : 근로복지공단